

# 지리산 케이블카 경쟁 2라운드 ... 전남·경북·경남 '사활건 공중전'

## 관광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구례를 비롯한 전남, 산청, 함양의 경쟁이 제2라운드에 들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최종불가 방침을 밝혔던 영암(월출산)까지 정부의 케이블카 설치 지원 방침에 따라 재추진에 나설 기미다.

인구 감소, 경제기반 취약 등의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오로지 관광수익에만 기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까지 적극 찬성 입장에서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경남도, 전남도 등 광역지자체까지 전면적인 경쟁 양상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높다.

전남 유일의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가 연간 이용객 30만명에, 수익만 20억원 이상 남기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도 이들 지자체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리산을 둘러싼 4곳의 경쟁 재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리산 권역에 케이블카 유치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영·호남 자치단체장 후보 모두가 당선됐다. 이들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리산 구역 케이블카 설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흥준

## 구례 노고단·영암 월출산 "이번엔 꼭 설치" 의지

### 해남 두륜산 등 전국 15곳 흑자...환경단체는 반발

표 경남지사가 지리산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경남이 아닌 전북과 전남 지역에 각각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구례와 남원, 산청과 함양이 줄다리기에 나섰지만 이제는 광역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강원도 양양과 서울 남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구례군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990년 정부로부터 사도설치시행 승인까지 받고도 24년째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케이블카만이 지역발전의 대안"이라며 "마땅한 산업기반도 없고 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에 관광객이라도 많이 찾아 지역농산물을 사가게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토로했다.

지리산권 케이블카 설치 논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환경규제 완화 방침이 가시화하면서 시작됐다가

2012년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가 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되고,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부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영·호남 지역 한 곳씩 케이블카 설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12일 케이블카 사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유치경쟁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케이블카 조성을 원하는 전국지역을 실태조사해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로 해 이들 4개 지자체와 전남, 전북, 경남은 사활건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구례 3.1km 영암 2.12km 계획, 환경단체는 반대=구례군은 29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호구역 외 3.1km 노선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고 있다. 1년에 40만대의 차량이 지방도 861호선 구례~남원 구간 통과를 위해 노고단으로 오르고 있고, 이 구간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차량의 지리산 통행을 막아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력화하



연간 20억원의 수익을 내는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겠다는 작전이다. 영암은 월출산이 기업과 석에 악산인 만큼 노약자들의 등반을 위해서라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며, 민간투자 200억원을 받아 2.12km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가 환경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주춤했다. 지난 1996년 군민여론조사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80% 이상이 찬성할 만큼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의 의지도

강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공동의장은 "이미 여러 차례, 오랜 기간 케이블카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런 그 부작용이 크고 후손에게 국립공원 자연 그대로를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

문"이라고 강조했다.

◇규모 작은 두륜산 케이블카 연간 30만명 이용=지난 2008년 문을 연 경남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해 무려 137만명이 찾아 연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전국 15곳의 케이블카가 대부분 흑자 운영되고 있는데다 관광객들의 방문 코스가 되면서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치도 높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가까운 곳에 케이블카가 있으면 한 번쯤 타고 간다는 것이다.

전남에서 유일한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역시 이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케이블카의 연간 이용객은 30만명 수준으로, 성수기 5만~10만명이 줄 서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있을 정도다. 수익은 20억원 규모, 8분 정도의 거리(1.6km)를 운행해 대인(9000원), 소인(6000원)을 받고 있다. 5000m의 면적에 상·하부 역사, 부대편의시설 등을 두고, 12년째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환경친화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머무는 공간을 주변에 만들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 유치

## 보건의료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를 포함해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분야 해외 확대 등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 논란은 더욱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영리병원 설립 물꼬 트나=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 의사결정기구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에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오고,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후속 투자가 이어져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진행된다. 의료법

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대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료법인 자법인이 메디칼(의료+숙박)업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줄기로 했다.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 가능해진다=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아래에서는 의료기관간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도 서로 달라 보건 의료 시스템 수출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정보보관 방법과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보안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의 제3차 유용 금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정보 교류와 활용이 자유로워지면 환자가 A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B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B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거나 환자가 직접 A병원에 검진결

과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연구개발이 필요한 의료분야의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통상진료비용의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 영리화 논란 이어질 듯=이번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이 알려진 직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말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능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며 "우리나라 병원들의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개발까지 넓힐 경우 영리목적의 자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거대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장악하고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투자창출 기대 효과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 금융

### 상장기업 인센티브 확대 연 70곳 신규 상장 유도

내년 초부터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상장 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년만에 가격제한폭 확대,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우선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업계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은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줄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상장기업은 주식배당 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완화한다.

/연합뉴스

**대성 Wellife**  
www.Wellife.co.kr

**뉴케어와 함께 성장할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대성웰라이프는 환자 및 노약자의 영양상태 개선 및 빠른 회복을 도와드리는 특수의료용식품인 '뉴케어'를 병원에 공급해온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리점주가 되시면 마케팅 전략에 따른 영업교육 및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드리며, 운영 관리를 위한 자세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뉴케어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수의료용식품 대리점 모집 공고**

모집부문	병원유동 대리점	제출방법
영업지역	광주/전남/전북 및 대전/충북/충남	• 이메일접수 : muwhan@daesang.com / 010-6336-1192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70 대성빌딩 5층 웰라이프 뉴트리선팀 앞
지원요건	• 해당지역의 병원영업 가능하신분 • 제1차 혹은 의사물도매업, 병원 영업경력자 우대 • 제품 영업에 전력을 기울이실 수 있는 분(우선대상)	제출기한: 채용시까지 면담: 서류검토 후 개별통보 예정
영업지역	이러시 소개세(경북/충남), 사업장등록증(해당지역 한정)	문의사항: • [광주/전남/전북] 여인형 대리: 010-8438-8044 / 062-943-9531 • [대전/충북/충남] 김형철 과장: 010-3112-2110 / 042-626-9966

대성주식회사 웰라이프사업본부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EPC빌딩 수협 지멘스 상무점 약법담임소 501호  
상무점: • 동행(은천지점) • 아비동감지점